

신자유주의 시대의 인문학,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박찬길

1. 신자유주의 시대의 대학: 경쟁과 적자생존

대학은 오늘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학생은 학생대로 학점관리나 영어 공인점수 취득 등 소위 ‘스펙’ 관리로 여념이 없고, 대학의 운영자는 정보 공개제와 외부 기관 대학평가 등에 제정신이 아니다. 입학업무 담당자도 요즈음은 겨울 한철이 아니라 1년 내내 진행되는 입시에서 교육부 방침과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작전을 짜느라 늘 전시체제다. 교수도 쫓기듯 살기는 마찬가지다. 강의실에서는 강의평가를, 연구실에서는 업적평가를 걱정하며 한 학기, 한 학기, 마치 강판될 순간까지 한 회, 한 회를 막아 나가는 선발투수처럼 가슴 졸이며 지낸다. 하루가 다르게 인색해지는 재계약조건과 나날이 알갭게 변해가는 정년보장심사가 친신만고 끝에 교수직에 입문

朴贊吉 이화여대 교수. 최근 논문으로 「인문 전산학과 문학연구: 소략한 개관」(2007)이 있다.

한 젊은 교수의 오금을 저리게 만든다.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뤄내며 세계 12위의 부국이 되었다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대학 캠퍼스는 삭풍이 뿜뿜 부는 ‘겨울공화국’이다.

무엇이 우리의 캠퍼스를 이렇게 각박한 곳으로 만들었는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것은 대학이 탈정치화하고 나서 시작된 현상이다. (아니, 어쩌면 대학의 탈정치화를 위해서 그런 요구를 했는지도 모른다.) 지난 1990년대 중반 정부가 갑자기 대학을 개혁하겠다고 나섰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은 세계수준에 따라가고 있는데, 나라에서는 올림픽도 개최하고 금메달도 따는데 가만히 보니 대학은 “만날 데모나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 김영삼정부는 ‘세계화를 국정목표로 들고 나왔고, 우리 경제를 급격히 개방하기 시작했으며, 정부에서는 경제뿐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곧장 ‘세계적 기준(global standard)의 적용을 요구하였다. 주지하다시피 급격한 세계화의 즉각적인 결과는 느닷없이 들이닥친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이었고, 그 결과 세계화의 구호가 다소 주춤하기는 했지만, 이후 상대적으로 진보노선을 내걸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IMF 구제금융을 졸업하는 데 성공했을지언정 ‘세계화를 포기하지는 않았다. 일각에서는 ‘좌파’라고 낙인찍기도 하는 그들조차 정치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선택과 집중, 경쟁과 시장논리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교육정책이 전형적으로 그랬다.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시발점이 된 이른바 ‘5·31 교육개혁안은 교육의 영역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을 그 기본 정신으로 삼았다. 경쟁의 성과를 평가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자원을 차별적으로 분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학교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대학가에는 ‘평가의 소용돌이가 시작되었고, 정부는 한 손에 재정지원이라는 당근을, 다른 한 손에는 정권 축소라는 채찍을 들고 대학을 몰아치기 시작했다. 대학가가 이렇게 삭막해지게 된 것은 한마디로 총장을 비롯한 대학 운영진은 말

할 것도 없고 일반 교직원, 교수, 학생 모두가 정부와 사회가 부과하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쟁과 평가만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구성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유일한 수단이며 세계화시대에 우리의 대학을 살릴 수 있는 묘안이라고 주장했고, 그때부터 ‘평가’의 문화가 우리의 대학을 장악했던 것이다.¹⁾

그렇다면 정부가 원하는 대학경쟁력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정부가 가진 조리법(調理法)을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대학정책을 책임지는 교육부의 한 관리는 ‘한국의 대학경쟁력 강화방안’이라는 기고문에서 정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 바 있다.

지식사회, 정보경제, 경제·사회 활동의 지구적 통합 등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가경쟁력은 교육경쟁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인식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자본과 노동력 투입 위주의 성장전략에서 지식과 기술을 체화한 인적자원개발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적자원개발 중심의 성장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근본적 혁신이 요구되며, 대학은 이를 통하여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인력 양성, 산업수요에 맞는 기술인력 양성, 지역혁신 활동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국가 경제규모는 세계 12위, 국가경쟁력은 15위이나, 고등교육경쟁력은 28위(IMD, 2003).²⁾

‘국가경쟁력은 교육경쟁력에 의해 좌우된다’라는 표어는 언뜻 듣기에 교육을 중시하고 교육자를 대접해주는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교육이

1) 한국 대학평가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에 관해서는 김홍균 「대학평가제도의 개선방향」, 박세일·이주호·우천식 편 『자율과 책무의 대학개혁』(한국개발연구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4) 357~97면.

2) 장기원 「한국의 대학경쟁력 강화방안」, 『대학문화』 127호(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4, 1~2월).

무엇보다 국가경제에 복무해야 한다는 매우 현실적인 요구의 표현이다. 국가경제의 중심전략이 “지식과 기술을 체화한 인적자원개발”이므로 이를 위해 대학은 “근본적 혁신”을 통하여 거듭나야 하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인력 양성, 산업수요에 맞는 기술인력 양성”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적어도 이 관리가) 파악하는 우리 대학의 현주소는 경제규모 12위, 국가경쟁력 15위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28위에 머물고 있고, 그것이 “근본적 혁신”을 요구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런 설명 없이 인용하는 IMD순위란 도대체 무엇인가. IMD는 스위스에 있는 한 경영대학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의 약어로서 이 학교는 해마다 각 나라의 ‘경쟁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는 IMD경쟁력 지수를 발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IMD는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기업체에 부설된 경영연구소에 더 가까운 기관인데, 여기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주된 대상은 기업인, 그중에도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고급 경영진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말하자면 세계의 사장님들을 배출하는 학교라는 뜻이다. 또 이들이 발표하는 ‘경쟁력 순위를 위한 자료는 객관적인 것도 있지만 상당한 부분은 해당 국가의 파트너기관(주로 기업 혹은 산업관련기관)에서 수집한 것이고 그중에는 해당 국가의 최고경영인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IMD대학의 경쟁력순위란 세계의 기업 CEO들이 좋아하는 순위라고 해석하면 큰 무리가 없다.³⁾ 우리나라 정부관리들이 그토록 신뢰해 마지않는 ‘국가경쟁력’ 순위도 바로 이 기관에서 내는 통계이다. 그 실적의 주요 사항을 공표하게 되어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라면 몰라도, 이제 겨우 그 기본적인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한국의 대학의 전모를 어떻게 스위스의 한 경영연구소가 파악할 수 있는지 알 수

3) 영문판 위키피디아 해당 항목 참조. <http://en.wikipedia.org/wiki/IMD_International>.

가 없고, 또 그러한 하나의 통계 때문에 한국의 고등교육 전체가 ‘근본적 혁신을 해야 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 IMD 대학경쟁력 순위는 필자가 찾아본 거의 모든 대학개혁 관련 문건에 최종적인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⁴⁾ IMD 경쟁력지수를 근거로 시작된 대학개혁이라면 그 처방은 쉽게 예측 가능한 것이다. 이 관리가 제안하는 경쟁력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의 자율 역량 강화: 교육인적자원부의 기존 기능을 정책 중심으로 혁신하고 기타 사무는 모두 자율화한다는 원칙하에 대폭적인 자율화를 추진하며, 자율화한 업무에 대해서는 엄정한 평가, 감사, 정보공개 등을 통해 수입 기관의 책무성 확보.
2. 경쟁을 통한 교육·연구 역량 제고: 평가를 통하여 대학 유형별·특성별 소수 우수 대학을 선정, 집중 지원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대학·분야 육성.
3.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 2004년부터 모든 대학에 대한 일반지원 방식을 폐지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정지원으로 대학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며, 경쟁력 없는 한계법인이나 부실법인의 경우 과감한 퇴출 유도. (강조는 인용자)

여러가지를 나열하고 있지만 핵심은 대학을 “자율적” 경쟁으로 유도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선택적으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경쟁력 없는 대학을 퇴출한다는 것이다. 즉 시장의 원리를 대학정책에 도입하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기업은 궁극적으로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경쟁을 한다지만, 대학이 ‘경쟁’을 한다면 과연 무엇을 위해 해야 한다는 말인가. 대학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궁극적인 기준이 기업 CEO의 마음에 달렸다면, 또 대학의 ‘경쟁력’은 대학이 ‘생산’하는 인적자

4) 대표적인 예로 박세일 「대학개혁의 기본방향: 철학과 원칙」, 박세일·이주호·우천식 편, 앞의 책 25~27면.

5) 장기원, 앞의 글.

원의 '경쟁력'이고, 이것이 곧 이들이 일할 기업의 매출에 대한 기여도라면 대학의 경쟁력도 결국은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결국 대학은 기업이 채용할 노동력의 공장이며, 이들을 통해 기업에 봉사하지 않는다면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주장인 셈이다.

중세의 대학이 국가와 교회를 위한 것이었다면 21세기 대학은 단연코 기업을 위한 것이다. 오늘날 '좋은' (즉 '경쟁력있는') 대학의 교육목표는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인력을 키우는 일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이 점을 학교에서 개최된 한 강연회에서 직접 듣기도 했다. 그 강연회의 강사는 인접 학교의 경영학과 교수로서 S그룹의 경제연구소 소장을 겸임하는 유명 인사였다. 그 강사는 필자의 학교 교수 전체를 모아놓고 하는 특별강연에서 우리가 대학에서 가져야 하는 교육목표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정해 주었다. 그 강사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우리가 길러야 할(그리고 모든 학부형이 바라는) 인적 자원은 한마디로 '엔트리 연봉 20만 달러의 글로벌 인재'라는 것이다. 필자는 그 강연을 듣던 그 당시에도 그 내용의 천박함과 표현의 조악함에 할 말을 잃었지만, 훗날 그것이 오늘날 개혁을 주도하는 정부의 대학관(大學觀)에 매우 부합하는 것이며 많은 대학교수가 그러한 견해를 별다른 저항 없이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큰 충격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필자가 대학의 인문학 전임교수로 근무하면서 시종일관 느껴왔던 어떤 불편한 느낌,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의 대세를 장악한 사람들의 간을 도무지 못 맞추고 있으며, 따라서 아무리 협조하려고 해도 어쩐지 남의 장단에 맞추는 것 같다는 그 고약한 느낌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를 단박에 깨닫는 직각(直覺, epiphany)의 순간이기도 했다. 필자는 명색이 전임교수로 10여 년간 강의를 해오면서도 내 교육의 '진짜'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셈이다. 대학은 이미 스스로 기업을 지향하게 되었으며, 대학의 개혁은 그 방법과 목표에서 기업의 개혁과 전혀 다름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여러 대학에서 총

장 스스로 CEO를 자임하거나 아니면 아예 외부에서 진짜 CEO 출신 인사를 총장으로 영입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대학을 기업처럼 경영해야 한다면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교수가 아니라 유능한 CEO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리더십'은 더 많은 '대학발전기금'을 모아, 더 많은 새 건물을 짓고, 더 많은 경쟁을 통해 IMD평가에서 더 좋은 점수를 얻고, 그 결과 더 많은 '엔트리 연봉 20만달러의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2. 기업화된 대학과 인문학

서울 시내에 소재한 K대학은 최근에 한 공기업의 전직 CEO를 총장으로 초빙했다. 그리고 그 총장 역시 취임과 동시에 강력한 개혁을 추진했는데, 그 개혁의 첫 '성과'는 인문대를 폐지한 것이었다. 인문대 전체가 없어진 것은 아직 다소 이례적인 일이라고 해야겠지만, 인문대의 소위 비인기학과, 즉 철학이나 독문과가 없어지는 일은 기왕에도 여러 대학에서 심심치 않게 목격되어왔다. 대학의 이러한 '구조조장'은 대학의 사명을 기업의 이윤의 극대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다. 대학의 개혁을 주장하는 한 사립대학 교수는 저서에서 '비인기학과의 폐과 가능성과 대책'을 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신입생의 열린 전공제와 더불어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은 재학생의 전과의 대폭 허용이다. 이와같은 방안, 열린 전공제와 전과 대폭 허용은 인기학과, 예컨대 영상영화, 언론홍보, 중어중문, 일본어, 사회사업, 경영, 국제통상, 보험수리, 생명정보, 미디어 등의 분야의 학생 수는 크게 증가하나, 불가피하게 독어독문, 불어불문, 철학, 사학 등의 비인기학과의 폐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한국

의 모든 대학이 예외 없이 고쳐하는 문제는 바로 이 문제이다. 학생들과 비인기학과 교수, 동문들의 극한 반대가 예상될 수 있지만 다음 세 가지 방안을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첫째, 교양교과과정에서... 문화연구 부문을 두어... 한국문화 영역과 외국문화 영역을 둔다. ... 대학의 전체 학생들이 한국문화 영역에서 1과목 이상, 외국문화 영역에서 1과목 이상 수강하도록 의무화한다. 둘째, 유럽이 게르만 유럽, 라틴 유럽, 영국으로 삼분되어 있으므로 독문과와 불문과 교수들은 게르만 유럽문화론, 독일문화와 통상, 근대 독일 역사, 근대 독일문학, 근대 독일철학, 라틴유럽문화, 프랑스 문화와 통상, 근대 프랑스 역사, 근대 프랑스 문학, 근대 프랑스 사상 등의 과목을 개설하여, 각 과목별로 독자적으로 강의하든지 아니면 팀 티칭하든지 하게 한다. 이와같은 두 가지 방안은 학생들의 선택에 따른 구조조정을 행하되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학교정책 차원에서 해결하는 방안이 된다.⁶⁾

요컨대 학생, 그러니까 ‘소비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하되, “독어독문, 불어불문, 철학, 사학 등의” 비인기학과는 모조리 교양과정으로 몰아서 교수로 하여금 최소한의 강의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독문과와 불문과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방안인데, 과목을 개설하되 가급적 과목명에 ‘문학, 역사, 철학 같은 고전적 명칭 대신 일괄적으로 “문화”를 쓰도록 하고 정히 그런 명칭을 써야겠거든 시대를 “근대”에 국한하든지 더 바람직하게는 “통상”과 연관짓는 것이 좋겠다’는 발상이다. 그것도 이런 과목들을 여러개 연속적으로 듣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씩 “독자적”으로 개설하게 하거나 굳이 연관을 짓겠다면 아예 한 과목으로 통합하여 “팀티칭”을 하도록 하게 하면 바람직하다고 덧붙이고 있다. 저자의 방안은 그 나름대로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또 무엇보다 솔직하다는 미덕은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고방식의 야만성이 경감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경우이며 개인적 견해

6) 조우현 『대학을 바꿔야 나라가 산다』(랜덤하우스중앙 2006) 130~31면.

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수년 전부터 독문과와 불문과 교수에게 (교양영어 담당으로) 전직을 권유한 대학들의 얘기를 들어왔고, 이미 여러 대학에서 인문대학 학과들의 명칭을 위의 글 저자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왔음을 알고 있다. 더군다나 위에 언급한 K대학에서는 저자의 처방을 거의 그대로 실천에 옮기면서 인문대를 폐지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사태가 이쯤 되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인문학 교수의 입장에서는 대학개혁과 인문학의 향방이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들의 개인적인 어려움은 차치하고라도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지금부터 아무도 독어와 프랑스어를 공부하지 않고, 아무도 역사와 철학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학문적·문화적 자산 전체, 정신적 자산을 모두 어떻게 계승·유지·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법, 경영, 경제만 하면 다른 것들은 정말로 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전문대학이라면 몰라도 명색이 '종합대학을 표방하면서 어떻게 그런 구성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인 선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실제로 이러한 움직임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대학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조차도 인문학의 경우에는 국가의 개입과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렇게 문학, 역사, 철학 중심의 인문학은 인간을 독립된 주체적 인간으로 열린 마음을 가진 인격으로 그리고 우주의식과 자연의식과 역사의식을 가지는 인간으로 만들어준다. 따라서 이 인문학은 개인의 정신적 도덕적 성숙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 불가결하다. 그런데 실제로 인문학은 ... 세계화,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소홀히 다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소위 대학교육이 설익은 직업주의에 빠질 위험이 크다. 따라서 이는 국가가 적극 개입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⁷⁾

현 정부에 대학개혁의 철학과 청사진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영학 전공교수가 이런 주장을 해주다니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하지만 그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지원의 방식을 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진다. 인문학 과목을 필수로 지정해준다고 인문학 전공자의 장학금이나 연구비를 늘려준다는 것은 여전히 고마운 일이겠지만 그가 생각하기에 ‘특히 중요한 마지막 방식은 전혀 다른 얘기다.

셋째는 인문학 교수와 비인문학 교수 사이의 학제적 연구를 지원하는 방법이다. 이 세번째 방법은 특히 중요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인문학의 진가는 다른 실용적 학문과의 학제적 연구를 통하면 보다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무용지물의 ‘용(用)’의 중요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앞에 인용한 저자의 감동적인 인문학 찬가에도 결국 인문학은 그 자체로 “무용지물”이며 그 “용(用)”의 중요성이 드러나려면 “다른 실용적 학문”과 연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인문학은 ‘문화와 같은 애매한 명칭을 달든지 더 적극적으로 ‘통상’ 같은 과목과 연합을 해야 그 생존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견해보다 훨씬 점잖게 표현하기는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몇해 동안 인문학 교수와 학생들이 느끼는 위협은 매우 실제적이고 심각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른바 ‘인문학 위기론’이 도처에서 제기되었고, 급기야 전국의 우수한 대학의 인문대학 학장들이 모임을 하고 정부의 특별한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⁸⁾ 그러나 대학개혁을 신자

7) 박세일·이주호·우천식 편, 앞의 책 16면.

8) 2006년 9월 25일에는 전국의 80여 개 대학의 인문대학 학장들이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여 인문학이 고사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학장단의 요구에는 인문학 진흥기금 설치 등 특별예산지원과 ‘인문한국위원회’ 신설 등의 제

유주의적 기조에 기반을 두어 추진하는 이상 정책담당자들이 아무리 유연하게 선의를 가지고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인문학은 몇몇 '특성화된 대학에서 남겨두면 되는 학문적 천연기념물 이상이 될 수 없다. 또 그 '특성화의 과정에서조차도 시장주의의 원리, 즉 '선택과 집중이나 '경쟁의 원칙은 여전히 포기할 수 없을 것이며, '특성화의 결과, 즉 그 내용에서도 생산성과 실용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선의와 악의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라는 원칙과 철학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3. 신자유주의적 인문학 지원

필자가 대학에 전임교수로 채용된 것은 1994년 가을, 그러니까 대학에서 개혁의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할 때였다. 돌이켜보면 대 그로부터 15년 동안 적어도 필자의 대학은 한순간도 비상시국이 아닌 적이 없었다. 그것은 그때부터 대교협, 중앙일보 등 외부 기관의 대학평가 작업이 시행되었고 대학으로서는 싫든 좋든 그러한 평가에서 '경쟁력을 입증하지 않으면 당장 정부의 재정지원에서 소외될 처지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대학은 평

도적 개선이 포함되어 있었다. 『동아일보』 2006년 9월 25일. 그 결과 정부는 상당한 예산을 특별히 배정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인문학한국(HK, Humanities Korea)사업이 시작되었다. 위기에 처한 인문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한 점과 상당한 재정지원을 이끌어낸 점은 긍정적인 일이었지만, 그러나 학장단의 호소가 인문학에 대한 사회의 새로운 인식을 촉발했다든지, 정부의 새로운 인문학 정책을 유도하지 못하고 결국 단발성의 특별에 산편성으로 끝났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한정적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그 재원으로 시작된 HK사업에도 여전히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경쟁의 방식이 적용되었다는 것은 인문학부 원로교수들이 어렵게 성사시킨 집단적 의사표시가 신자유주의적 대학정책의 '대세를 뒤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교수들에게 더 큰 ‘생산성’, 즉 ‘평가에 도움이 되는 더 많은 연구비, 더 많은 연구업적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대학에서 교수들에 대해 쓸 수 있는 당근과 채찍은 재임용, 승진, 승급과 관련된 조건들이었다. 좋은 ‘생산성을 기록한 교수들에게는 더욱 빠른 승진과 더 많은 보수를, 그렇지 못한 교수들에게는 승진과 보수에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주는 제도는 이제 거의 모든 대학에서 일반화되었지만, 필자의 대학은 그러한 제도를 비교적 일찍 도입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필자는 싫든 좋든 이러한 ‘생산성 제고의 과정에 참여했고, 그러한 과정이 인문학에 끼치는 실제적인 영향이 어떤 것인지를 개인적으로 체험해왔다고 볼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그동안 필자가 수행했던 수차에 걸친 단독 혹은 공동 ‘프로젝트들은 필자를 정부 당국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더 ‘생산적으로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들이 반드시 진정으로 의미있는 학문적 결실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별 차이는 있겠지만 재정적 지원이 신자유주의적 원칙에 입각해 있는 한 오히려 그것이 인문학 연구의 형식과 내용을 치명적으로 왜곡할 수도 있겠다는 점을 절감했다. 그것은 필자의 개인적인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하게는 그 학문적 성과들에 대한 평가가 앞에서 설명한 경제적 목적과 긴밀하게 연결되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가령 모든 연구업적은 ‘평가를 위하여 출판의 시기와 출판방식에 따라 일정한 방식으로 계량화된다.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평가와 연구업적평가, 학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대다수 연구프로젝트 평가도 대개 1년 단위로 이루어진다. 교수 개인의 연구업적이 승진·승급을 위해 그 대학에서 ‘평가되고, 교수 개개인의 연구업적이 모여 그 대학의 성과로 ‘평가하는 것이 모두 1년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물론 다년간의 연구과제도 있고, 승진의 경우도 직급에 따라 3년에서 5년 단위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이고 개별 교수로서는 평가가 진행되는 해당 연도에

연구업적이 출판되어야 한다. 연구업적을 학술지에 논문의 형태로 낼 수도 있고, 또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단행본에 대한 인정기준이 터무니없이 낮고, 그나마 단행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술지에 논문으로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학술지는 국내와 국외에서 발행되는 학술지를 달리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학술진흥재단의 업적인정 기준에 의하면 소위 ‘저명 국외학술자’의 경우 국내 학술지의 2, 3배의 업적을 인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국외 학술지의 경우 집필과 투고, 출판에 이르기까지 1년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따라서 보통 인문학 교수는 국내학술지에 원고지 1백 매 내외의 논문을 신고 이를 점수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해진 시한 내에 ‘빨리’ 일정한 점수를 받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 거기에 1년 시한의 연구비 ‘지원’을 받았으면 그 시한이 더 절대적이다. 따라서 ‘평가’를 의식해야 하는 한국의 인문학 교수들은 호흡이 긴 연구를 할 수 없다. 업적을 ‘빨리’ 내야 하기 때문에.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 등급제도이다. 연구업적을 ‘빨리’ 계량화하려면 객관적인 점수 환산방식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 학술진흥재단이 학술지를 ‘심사하여’ ‘등재지’와 ‘등재후보지’를 나누어 다른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젊은 연구자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학술진흥재단으로서의 개별연구업적의 질 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장치라고 하겠지만, 이러한 제도의 틀 안에 있는 개별 연구자로서는 내용이 좋은 논문을 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등재지’에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논문을 여러 편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대학 단위의 외부 평가든 개인 단위의 연구업적 평가든 모든 평가는 ‘무엇을 썼느냐는 묻지 않고, ‘몇 점으로 환산되는’ 업적을 냈느냐만 묻기 때문이다. 어쩌면 연구업적의 평가기준을 국가기관이 독점적으로 장악하는 한 ‘무엇을 썼느냐고 묻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은 일일지도 모른다. 현재에도 그렇지 않다고 자

신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국가경제에 봉사하는’ 내용의 논문을 좀더 노골적으로 선호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인문계 학술논문의 점수화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또다른 문제는 국외학술지와 관련한 것이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국외학술지는 A&HCI(Arts and Humanities Citation Index)의 목록에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저명’학술지와 ‘일반’학술지로 나뉜다. ‘저명’은 ‘일반’의 2, 3배의 점수를 받는다. 그런데 A&HCI는 미국의 톰슨 로이터스(Thomson Reuters)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상업용 학술지 데이터베이스에 불과하다.⁹⁾ 그것이 아무리 활용 가능한 학술지 목록 중 가장 광범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유진 가필드(Eugene Garfield)라는 미국의 한 과학자가 만든 목록으로서 기본적으로는 학술논문의 가치를 인용의 횟수에 따라 측정하도록 고안된 자연과학 학술지 목록에서 출발한 것이다.¹⁰⁾ 미국 사람이 영어권의 자료를 중심으로 만든 목록이니만큼 영어권 이외의 지역에서 산출된 자료가 제대로 포함되어 있을 리 만무하다. 그런데도 A&HCI가 한국에서 국외 ‘저명’학술지를 판별하는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영어권, 특히 미국에 대한 학문적 종속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밖에 없다. 가령 기왕에도 천덕꾸러기였던 불문학과 독문학의 원어 논문은 어떻게 온전한 평가를 받는다는 말인가. 또 국문학과 동양철학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따라 하기를 좋아하는 미국에서는 인문학 연구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NEH(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같은 기관이 학술지를 심사하거나 그 등급을 정하지도 않고, A&HCI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학자들의 논문에 점수를 부여하지도 않는다. 국가기관은 기본적으로 같은 분야의 동료의 평가(Peer Review)를 신뢰하고, 또 그에 따라 운영되는

9) <http://en.wikipedia.org/wiki/Arts_and_Humanities_Citation_Index> 참조.

10) <http://en.wikipedia.org/wiki/Institute_for_Scientific_Information> 참조.

개별학술지의 개별평가를 신뢰한다. 미국의 정부기관은 미국 학자들의 판단을 신뢰하고, 한국의 정부기관은 한국 학자들이 아니라 NEH가 채택하지 않는 미국 회사의 목록을 더 신뢰하는 것이다. 미국은 되고, 한국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필자가 최근까지 연구책임자로서 관여했던 'BK(Brain Korea) 21사업'의 경우 '평가의 문제는 인문학 연구의 내용과 형식, 그 전통적인 관습에 더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정부로서는 BK사업이 이른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마음먹고 분야별로 소수의 대규모 지원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은 '사업단'에 더 큰 책무성(accountability)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소수 학교가 그 대상이 되었으므로 인문학의 전체 판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의 인문학부 전체가 존재의 위기를 맞는 상황에서 정부의 선택적 지원을 받는 인문학 부문이 정부에 의해 일정한 방향으로 조건지어진다는 것은 한국 인문학 전체의 장래를 생각할 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인문계 BK 프로젝트의 성격과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논하는 것은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선다. 하지만 필자의 경험으로 판단할 때 인문계 BK 프로젝트는 그 평가기준에서 앞서 언급한 정부당국자의 신자유주의적 원칙을 더욱 강력하게, 그리고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대학원 프로그램인데도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은 비중으로 평가한다든지, 교수들의 연구비 수주와 산학협력을 강조한다든지, 또 그 운영에서 동종의 '사업단끼리의 무한경쟁을 유도한다든지 하는 것을 보면 이 프로젝트는 일관되게 대학원 프로그램을 '기업형으로 운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¹¹⁾ 그러나 인문학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BK

11) 대학원의 교육프로그램인데도 각 대학의 학과를 '사업단'이라 하고 그 학과장을 '사업단장'으로 지칭한다. 2단계 BK21사업의 기본 성격과 운영방침에 대해서는 BK사업 홈페이지 <http://bnc.krf.or.kr/home/link.do?method=get&menuSN=0201_01> 참조.

의 모든 규칙과 평가가 전제하는 교육과 연구의 기본 모델이 이공계의 것이라는 데 있다. 기령 인문학 연구방식이 사회과학 혹은 자연과학과 달리 기본적으로 단독 연구라는 사실을 BK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기령 필자의 전공인 영문학의 경우 국외의 어떠한 학술논문도 복수의 저자가 쓴 것을 거의 본 적이 없다) 기존의 관행에서는 학생의 입장에서 박사학위 취득 전에 학술지에 논문을 실기가 매우 어렵다는 인문학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석박사를 가리지 않고 참여 대학원생들의 논문 게재를 독려한다든지, 아니면 지도교수와의 공동연구에 더 많은 점수를 인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인문학 연구의 전통과 관습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학생들에게 국제학회 발표를 독려하고 이를 점수화하지만 인문학의 특성상 학생 자력으로 권위있는 국제학회에서 단독으로 발표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렇다고 지도교수와 ‘공동발표’는 더욱더 우스운 일이다. 인문학은 국내에서도 국외에서도 공동실험실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이다.¹²⁾ BK21사업은 대학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고 전체적으로 (사회과학을 포함한) 인문학에 배정된 예산의 비율은 전체 예산의 14.2%에 불과하지만 총액이 1년에 4백억원에 달할 정도로 인문학으로서는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대규모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¹³⁾ 따라서 이 사업이 우리나라 인문학의 교육과 연구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 그 전반적인 결과는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필자 개인적으로 경험해온 바에 따라 판단하건대 인문계 BK사업에서 언급한 선택과 집중, 경쟁과 생산성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원칙이 관철되는 한, 그리하여 그것

12) 2단계 BK 21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과 그 방침은 사업의 진행과 함께 세부적으로 계속 개정되지만 그 기본적인 방침은 변함이 없다. 성과의 평가는 평가방식, 업적인정 기준 등 매우 복잡한 규정이 적용되며 고도의 행정적 능력을 요하는 과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2단계 BK21 업적평가지표 설명자료 <<http://bnc.krf.or.kr/home/nboard.do>> 참조.

13) <<http://bnc.krf.or.kr/home/link.do?method=get&menuSN=020105>> 참조.

이 인문학의 독자적인 발전보다는 정부가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적 대학개혁의 당근과 채찍으로 기능하는 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인문학의 위기를 극복하는 희망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위협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는 것이다.

4. 신자유주의 시대의 인문학, 어디로 갈 것인가

대학이 ‘경쟁의 대상이 되고, 그 ‘경쟁’의 목표가 ‘생산성의 향상과 ‘경쟁력의 강화가 되는 순간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대학에서 인문학이 어떻게 취급될지는 자명해 보인다. 새로운 대학의 환경에서 인문학 교수가 예전보다 더 비싸게 살아야 하고,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더 나은 대우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문제는 오히려 간단할 수도 있다. 진짜 문제는 인문학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선택과 집중, 경쟁력과 생산성의 원칙들이 인문학 분야의 ‘정상적인’ 연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데 있다. 인문학이 상아탑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실천적으로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에 기여해야 한다는 데 토를 달 생각은 조금도 없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강요되는 무조건적인 경쟁과 이를 담보하기 위한 평가제도는 인문학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가짜 연구만 양산하고 인문학 연구의 건강한 인프라를 파괴한다. 인문학은 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고 그 사회의 이상적인 인격을 형성하기 위한 처방전이다. 이를 위해 사회와 역사를 거시적으로 성찰하며 인간의 본질을 탐구한다.¹⁴⁾ 이러한 인문학의 내용과 형식에 계량적인 평가제도

14) 줄고 「정보시대와 인문학의 위기: 서양인문학의 이념과 과학주의의 도전」, 『디지털시대의 인문학, 무엇을 할 것인가』(사회평론 2001) 15~48면 참조.

를 통해 자연과학, 그것도 특정 응용학문의 학문적 관습을 덧씌우거나 경제와 경영의 이름으로 공리주의적인 효용과 자본의 생산성을 강요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인문학의 학문적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그것은 인문 정신을 모독하고 인문계 교수의 직업적 자긍심을 파괴한다. 아무리 물질적 가치가 지배하고 실용주의가 숭상되는 사회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국가와 기업에 봉사하는 인문학'이란 일종의 형용모순일 수밖에 없다. 인문학이 그 사회적 소임을 다하려면 국가권력과 자본의 힘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그것들과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 특히 인문학부는 그 사회의 올바른 발전방향에 대한 이념을 생산하고, 그 사회구성원 전체가 가져야 할 도덕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곳이며, 이를 사회에 전파하는 비판적 지식인의 산실이다. 이러한 지성의 못자리를 온전하게 보전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그 사회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사회 전체가 져야 할 당연한 의무이다. 사회가 근시안적 안목으로 인문학자들에게 공리주의적 효율과 생산성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인문학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고유한 사회적 자산과 그 생산양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옳은가. 인문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정부의 지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그 관심과 지원은 인문학 고유의 이념과 원칙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줘야지 신자유주의적·경제주의적 정책의 집행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곤란하다. 인문학도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받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무성을 당연히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인문학자들도 지원에 값하는 사회적 역할과 기여를 해야 마땅하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적절한 제도적 장치 안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장치가 연구자 혹은 대학간의 소모적인 경쟁이나 무의미한 실적경쟁을 유발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지원'이 곧 재정적 '투자'를 의미하는 경제주의적 관점에서는 한카하고 한심한 발상이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인문학의 정

상적인 발전을 위해 재정적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와 사회가 인문학이 생산하는 가치와 이념, 그리고 인문학 연구자의 정신노동이 갖는 고유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한 인정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야 재정지원도 의미가 있다. 세상이 아무리 바쁘게 돌아가도 국가는 기본적으로 연구자를 신뢰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마음껏 그들의 방식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냥 좀 내버려 두어야 한다. 불필요한 통제와 감시를 거두고 그들이 좀더 여유롭게 창의적인 상상력을 키우고, 좀더 안정적으로 본질적이고 전체적인 문제에 관해 비판과 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허락해야 한다. 그것이 인문학을 연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가 현재의 경제위기보다 더 심각하고 본질적인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이 사회의 어느 구석에서 '결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지혜로운 통찰력을 누군가 발휘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 인문학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